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 대하여 ○○동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원 부과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동 ○○○-○○ 번지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후 20○○.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불법현황 중 관리자, 원두막, 창고 등을 모두 철거하여 나무 식재만 남겨둔 상태였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고 다만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감나무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겨울철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생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식재가 가능한 봄철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후 불법현황 중 관리자, 원두막, 창고 등을 모두 철거하여 나무 식재만 남겨 둔 상태였는데 봄철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까지 청구인은 단 한 차례도 의견제출서 또는 산림복구계획서 등 원상회복 의지를 보이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 2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동 ○○○-○○ 번지 위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20○○.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하였고, 20○○. ○○. ○○.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현장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1호에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호에는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으로,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다.

2) 청구인은 20○○. ○○. ○○. ○○구청을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불법현황 중 일부 시정 완료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

실과 임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식재가 가능한 봄철까지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알렸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시정조치에 대해서 나무식재가 가능한 봄철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그렇기에 청구인은 봄이 오면 감나무 식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나무식재를 위하여 봄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복구계획서였고, 그렇기에 사업계획서는 산림복구와 관련한 피청구인 소속 △△△△과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담당하는 □□□□과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이 감나무 식재를 위해 봄철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나무 식재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불법행위가 시정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